기업 80% "개성공단, 재가동하면 다시 들어가겠다"

재개 촉구 목소리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된지 오는 10일로 꼭 10년이 된다. 개성공단이 내려다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북위 37.9° 동경 126.6°, 한반도 개성특별시 봉동리.

개성공단은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던 금담 권주옥 대표는 10년전인 2016년 2월10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는 2007년 당시 개성공단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스포츠 및 캐주얼 의류를 만들었다. 개성에서 10년간 공장을 돌리다보니 북측 근로자들과의 호흡도 잘 맞았고 생산량도 어느덧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그런데 그날 날벼락을 맞았다.

갑작스런 폐쇄 10년, 기업 피해 가중
지원금 피해액 절반 미달, 고사 위기
해외 이전 고비용 한계, 대체지 고전

남측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것이다. 권 대표를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튿날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맞불을 놨다.

미처 철수 준비를 하지 못한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생산한 제품이며 원부자재들을 개성에 그대로 둔채 남쪽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와서 다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권 대표는 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지체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1차 가동 중단으로 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던 그는 10년전 전면 폐쇄로 20억원 가깝게 피해를 봤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피해액의 절반도 안된다. 거래처와 약속을 지키기위해 대체 생산을 하느라 20여개 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서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가격을 쳐줬다. 남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하느라 20억원 가량을 더 손해봤다.

개성공단을 뒤로하고 베트남으로 가 공장을 세웠지만 화재가 나면서 또 손실을 입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권 대표는 "지금 호치민 인근에서 600명 정도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베트남이 개성보다 4배 정도는 비싸다. 최근엔 인건비를 올려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도 섬유가 점점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다"며 담담하게 분위기를 전했다.

◆개성공단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입주사 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10곳 중 8곳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인력 확보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화 유사성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 등을 꼽았다. 입주기업의 87.2%는 공단 운영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였던 광일실업 신인섭 대표도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들어가시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단 폐쇄 후 전주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유아복을 생산하고 있는 신 대표는 국내에선 생산단가 등을 맞추기 쉽지 않아 동남아 등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 선행돼야 할 과제들도 많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대표적인 단지로서의 영속성 확보가 최우선 순위다.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동참이 중요하다. '중립지대'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영구적인 합의가 그 중 하나다.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정경분리 원칙 적용도 반드시 관철돼야한다.

개성공단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면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조봉현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북한은 그동안 계획만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20여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자유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중국이 공급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성이 더 큰 메리트가 있는 만큼 북미간 실마리가 풀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대기업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3통·인력확보 해결, 개성 2.0 시급
정경분리 관철, 국제적 영속성 확보
과거지원 인색 지적, 정부 결단 촉구

이와 함께 과거 개성공단 가동시 해결과제로 꾸준히 지적돼왔던 '3통'으로 불리는 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풀어야한다.

한때 최대 5만5000명에 가까웠던 인력 문제도 향후 개성공단 확대를 감안해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우선 순위로 현지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측에도 휴대폰 보급이 많이 된 만큼 개성공단의 경우 휴대폰 허용 문제나 임금 직불 문제도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1면 '경제적 이익… '서 계속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 남북 공동성장 '기회'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은퇴 산업역군 오찬 행사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물류에 이점이 있고 생산품에 대해 'Made in Korea'를 붙일 수 있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던 만큼 재개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가동 중단 전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해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북한 개혁 개방과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 남북 공동성장과 평화공존의 현장임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면 남과 북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85호'에 담긴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5년간 남한이 얻게될 경제적 이익은 22조2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단 재개 후 5년 뒤 남한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2070명에 이르지만 간접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약 1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호 기자